

도, 전북형 新 금융모델 구현에 '성큼'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발굴·제안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이 '자산운용의 기반 확장, 기후에너지, 디지털 농생명'을 중심으로 그 모습을 점차 갖추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 외 금융기관 인사, 국책연구원, 지역전문가 등 15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전북 금융 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금융도시 육성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23. 2월 출범)의 신상훈 민간위원장(現 공동위원장, 前 신한금융

지주 대표) 등 전·현직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디지털금융을 활용한 금융중심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산운용, △기후에너지, △디지털 농생명, △새만금 사업 지원, △보

험·공제·헬스케어, △벤처 금융허브 등 기존의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7개 허브 전략을 소개하고, 우선 추진과제로 디지털금융, 퇴직연금 등 자산운용 기반 확장, 새만금개발 등 에너지전환산업을 뒷받침하는 기후에너지 금융모델, 디지털 농생명 금융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제안되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허브 발전계획(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금융중심지의 여건을 강화해가며 관련 정부계획의 반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권정환)과 함께 차기 금융중심지로서 여건 마련을 위한 전북 금융 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 및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포럼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자문을 추진해왔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북형 新 금융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서 차기 금융중심지로서의 당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 외 금융기관 인사, 국책연구원, 지역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금융 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 권익증진 위해 시군 현장 찾아

전북자치도, 22개 협업기관과 함께 순창, 김제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군 일선 현장을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한국소비자원·각 시군·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는 지역민의 서비스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8일(순창)부터 9일(김제)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2개 협업 기관이 참여해 교육, 이동 상담 등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뿐 아니라 자동차·가전제품 무상점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순창군 사회 배려계층에게 가전제품과 생필품, 식품 등 약 6천만 원 상당의 물품(35종)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각 시군 노인종합복지회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식품 소비기한 등 고령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참석자들의 건강진단 및 장수사진 촬영, 은퇴 후 자산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울러,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의 협조를 받아 지역주민을 위한 휴대폰·방송 무상수리, 사용이 어려운 소형 폐가전을 수거하는 자원 순환 환경 보전 활동을 실시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에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티브이 등 대형가전의 기능과 안전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방문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각 시군 주차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5사의 차량 무상점검이 실시됐고, 한국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등 석유 품질 검사와 함께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여러 기업, 기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소비자의 복리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전한 거래행위는 물론 각종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행사가 순창군·김제시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남원 춘향제 축제장 안전관리 총력

남원시와 함께 축제장 민·관합동 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주 군산 남원 등 도내 9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히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94회 남원 춘향제'에 대비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축제 현장을 찾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전복도와 남원시를 비롯해 경찰·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축사 등 관계

자 20여명이 함께했다. 점검반은 축제 주최 측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기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질서유지 및 인파 관리 대책 △임시시설물, 전기, 가스,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남원시 및 제천 위원회에 전달해 개막 전에 보완 조치하고, 축제 중

요 시까지 현장 상황유지를 독려하는 등 안전 위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포함 관리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 대책 기간 운영 △재난안전 민간단체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참여시키는 등 시·군 축제 및 안전부서와 안전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먹거리 바가

지요금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신고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제94회 춘향제를 앞두고 있는 남원시는 '착한 가격,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 등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남원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로 도민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1분기 화재·구급·구조 '감소'

작년보다 모두 줄어... '결과 토대로 안전 대책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4년 1분기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구급·구조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활동별로 살펴보면 도내 화재는 지난해 대비 768건에서 597건으로 22.3% 감소했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또 재산 피해는 총 63억 5600만원으로 전년(96억2700만원)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꽂초 21.3%(71건), 쓰레기 소각 21.0%(70건),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 11.4%(38건) 순이었다.

화재 건수가 감소한 이유로 지난해 보다 올해 감수량 및 감수일수가 늘어난 데다 농촌 지역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한 교육 추진 등으로 들불 등 야외

화재가 감소한 것으로 전북소방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구조 출동 역시 올해 1분기 6421건으로 지난해(8150건)보다 21.2% 감소했다. 이는 화재 출동이 줄어들면서 관련 구조 활동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구급 출동은 3만1334건으로 전년(3만 5216건) 대비 11%(3882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종식 및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응급환자의 구급차·응급실 이용 감소 등의 이유로 이송 인원은 2146명 감소한 1만717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줄어들었던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전북소방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위한 '응급 및 비응급환자의 차이점'을 다룬 홍보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뉴스

전북자치도, 상반기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악취 및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해 도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

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중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시군별 4~6개소를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

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 기준, 퇴액비화 기준,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합동 지도·점검으로 400개소 시설을 점검하였고, 총 44건(무허가·미신고 5건, 관리기준 위반 2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1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